



# 분야별(산업·고용·교육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릴레이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전문가들은 ①교육구조개혁 지연시 발생할 막대한 비용, ②지역·고용·재정지원 방식과 제도 개편의 필요성, ③국방·산업·병역 자원 감소 대비 등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중점 과제들을 제시

① (교육): 대학 통폐합 정책의 우선 추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② (지역·고용): 데이터 기반 예산집행, 노동시장 내 일자리 재조정 등

③ (국방·산업): 상비예비군 확대, 주택연금 상품 다양화, 고령친화산업 고부가 가치화 등

기획예산처는 4월 20일(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고용·교육·지역·국방 등의 개별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전문가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6.4.20.(월) 14시 ~ 15시 30분 / 정부세종청사

○(참석자) 기획예산처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 인구구조혁신과장 등  
전문가 조현승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오삼일 팀장(한국은행),  
임종헌 연구위원(교육개발원), 임은선 선임연구위원(국토연), 조상근 교수(KAIST)

기획예산처는 인구위기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현실화된 위험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 중에 있다. 지난 1.16일에는 '인구위기 대응 전문가 간담회(총론)'를 개최하였고, 2.11일에는 '경제활동인구 확보', '초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고용 등 개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째, 전문가들은 교육분야의 경우 구조개혁 지연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령인구 급감과 대학의 존립위기는 '예정된 미래'이고

조속한 대응이 부족할 경우, 청년인구 유출, 상권 침체, 지방 소멸 가속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폐교에 앞서 **대학 통폐합 정책의 우선 추진**, ▲**균형발전·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방향으로 **국립대 개편**, ▲**공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역·고용분야는 재정지원 방식·제도 개편이 필요한 분야**로 논의되었다. 우선, 지역의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나 기본적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구지표 외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지역의 기획역량 제고·성과 기반의 피드백 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전문가 파견** 등을 제안하였다. 고용 분야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세로 인해 **노동공급 감소**와 함께 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산업 부문별 불균형 대응**과 함께 ▲**AI 확산·산업 수요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내 일자리 재조정(Job Reallocation)**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단기과제로 추진이 시급한 분야**로는 **국방분야와 고령화 관련 산업**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선, 병력자원 감소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실버 아미 도입 등의 **중장기 과제**의 추진과 함께 ▲**지금 당장 부족한 병력 대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상비에비군(숙련되고 상시화된 예비역)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건강하고 고소득 자산을 가진 고령층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상품 다양화**,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인구구조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고용, 교육, 지역, 국방 전반에서 현재의 구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타이밍을 놓치면 위기의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선제적으로 공론화**하고, 향후 마련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미래전략실 인구구조혁신과	책임자	과 장	신대원 (044-214-1730)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halamadrid@korea.kr)
			사무관	윤다원 (Oneforall@korea.kr)

